



보도 일시	2022. 8. 15.(월) 12:00 (화요일 조간)	배포 일시	2022. 8. 12.(금)
담당 부서	기후탄소정책실 기후경제과	책임자	과장 전완 (044-201-6580)
		담당자	사무관 박지영 (044-201-6590)

## 탄소중립 촉진한다...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 착수

- 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운영 -

- 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‘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(이하 협의체)’의 첫 회의를 8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상연재 회의장에서 개최한다.
  - 협의체는 관계부처,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별 대표기업 및 협회,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, 3개 분과(제도개선, 유상할당, 배출효율 기준할당)로 구분해 운영한다.
- 먼저, 제도개선 분과에서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,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.
  - 특히, 기업의 의견을 듣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 확대, 배출권시장 활성화, 불합리한 행정 부담 완화 등의 과제를 찾아낼 계획이다.
  - 이와 함께,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기업 지원 확대 방안과 탄소차액계약제도\* 등 감축 신기술·신공정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 다변화 방안도 논의한다.
    - \* 정부-기업 간 탄소가격 보장 계약을 통해 혁신적 감축기술의 조기 적용 등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투자 촉진

- 유상할당 분과와 배출효율기준할당 분과에서는 중장기적인 배출권 할당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한다.
  - 유럽연합(EU)의 탄소국경제도(CBAM) 도입 등 국제 사회의 탄소 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등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할당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.
  - 또한,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유상할당 확대방안을 논의하고, 온실가스 감축을 잘하는 기업이 배출권 할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배출효율기준(BM) 할당\* 확대 세부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.
    - \* 배출효율기준(BM) 할당은 업종별 평균 배출 원단위를 기준으로 하여, 감축 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할당방식이며, 배출실적기준(Grand Fathering) 할당은 과거 배출량 기준으로 할당하여 감축효율 수준을 고려하지 않음
- 환경부는 산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.
  - 논의된 과제 중에 지침 개정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연내 추진을 완료하고, 중장기 검토 과제는 차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.
-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“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라면서, “배출권거래제도 개선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붙임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운영계획.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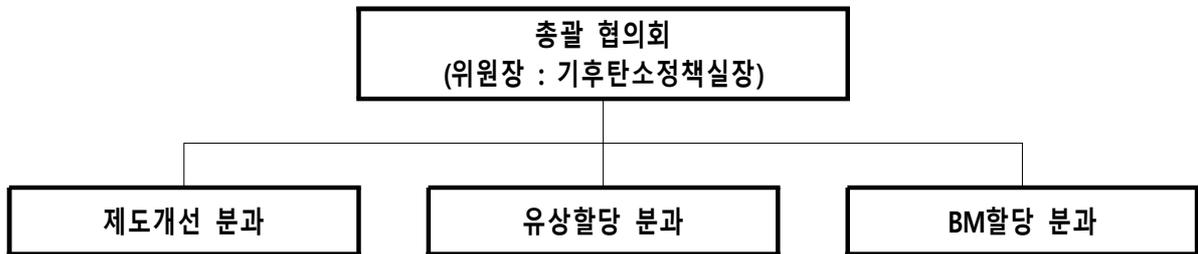
- (추진 목적) 배출권거래제 관련 새정부 국정과제\* 구체화 및 합리적인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규제개선 건의과제 논의

※ [국정과제 86-2] 탄소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도 설계

: 유상할당 확대안을 검토하고, 늘어난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선순환체계 구축

- (구성안) 환경부 기후탄소실장(위원장), 관계부처\* 과장,  
주요 업체·협회, 유관기관(GIR, 환경공단 등), 전문가 등

\* 환경부, 국조실, 기재부, 산업부, 국토교통부, 농림부



- (운영방안) 월 1회 개최(8~12월, 5회), 총괄 협의회(8월) 개최 이후 분과별 논의를 통해 주요 과제의 세부사항 논의·검토

- (주요안건)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및 규제합리화 방안 논의

- 제도개선 분과 : ①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 및 추가 과제 발굴,  
②제3자 참여 등 시장 활성화 방안, ③할당업체 지원 다변화 방안

- 유상할당 분과 : 유상할당 적용대상 및 비율 확대방안 등

- BM 할당 분과 : BM 적용 대상 업종 확대방안 등

- (추진일정) 지침 개정 등으로 가능한 개선 과제는 연내 추진 완료,  
할당방식 등 중장기 검토 과제는 차기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